

'빚 권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

2017. 9.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검토배경	1
II.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2
1. 현황 및 문제점	2
2. 규제 강화 방안	4
(1)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개정 사항	4
(2) 감독 강화 및 자율개선 유도	7
(3) 법적근거 마련	8
III.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9
1. 현황 및 문제점	9
2. 규제 강화 방안	10
(1) 자율감축 행정지도	10
(2) 행정규제	10
(3) 법률개정	10
IV. 추진계획	11
< 참고1 > 대출모집인 제도의 문제점	12
< 참고2 >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주요 규제 내용	13
< 참고3 > 대부업 광고 규제 현황	14

I. 검토배경

□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손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관행 증가

○ 대출모집인은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push-마케팅)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영업망을 보완*하여 편리하고 과도한 대출을 유도

* 현재 110여개 금융회사에서 약 12천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는 신규 가계대출의 25~30%를 대출모집인에게 의존

○ 대부업광고는 '쉽고 빠르다'는 이미지를 주입하여, 상환부담에 대한 고려없이 고금리 대출에 접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

<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 >

- (대출모집인) A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자영업자 김모씨는 추가대출을 위해 대출모집인으로부터, B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권유받고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부업 광고) 주부 이모씨는 방송에서 '신규고객 최대 30일 무이자'라는 대부업 광고를 보고, C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아 30일 내에 상환하였으나, 이후 금융회사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상황에 직면

□ 그간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를 지속 보완해 왔으나, 가계부채 증가 및 금융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 우려가 지속

- * ① (대출모집인 제도) 협회자율규제(06년~),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정(10년), 통합조회시스템(12년), 수수료 상한제(13년 대부업법), 모집경로 등 확인 의무(15년 신용정보법)
- ② (대부업 광고) 대부업 협회의 사전 자율심의 제도 운영(12년),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경고문구 포함(12년), 방송광고시간 제한(15년), 채무 조기상환조건 포함(17년)

□ 금융당국은 손쉽게 과도한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하여,

○ 우선,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및 「대부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

○ 아울러, 대부중개업 등 대부업 규제강화 방안*을 추가 마련할 계획

* 과장·허위 설명 등 불건전 중개행위 규제근거 마련, 업무 재위탁 금지 등

II.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① (영업현황) 대출모집인 수는 '15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며, 모집규모는 '1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6년은 소폭 감소

① (모집인 수) '16년말 110여개 금융회사에서 약 12천여명이 활동 중으로 '14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2년간 소폭 증가*

* ('12년) 18,464 → ('13년) 15,112 → ('14년) 9,526 → ('15년) 11,122 → ('16년) 11,781

* (업권별(명); '16년말) (은행) 3,678, (저축은행) 3,408, (할부금융) 2,796

② (모집규모)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규모는 모집인을 활용하는 금융회사 신규 가계대출의 25~30% 수준

- '15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16년에는 은행권 중심으로 감소

* ('12년) 57.4조원 → ('13년) 59.1조원 → ('14년) 75.6조원 → ('15년) 97.2조원 → ('16년) 81.8조원

- 은행권은 담보대출(30.8%) 모집비중*이 높고, 저축은행(53.5%)과 할부금융사(62.2%)는 신용대출 모집비중이 높음 ('16년기준)

* 신규 대출금액 중 대출모집인에 의한 모집금액 비중

③ (수수료)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연간 5,410억원 ('16년기준)

- 수수료율은 신용대출(1~5%)이 담보대출(0.2~2.4%)의 2배 이상이며, 은행(평균 0.3%)에 비해 저축은행·할부금융(2~5%)이 높은 수준

- 대출모집금액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며, 대출종류·담보종류·대출기간·대출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상이

* 「대부업법」에 따라 대출모집수수료는 대출금액의 5% 이내로 제한

② **(관리실태)** 대출모집인의 변동성이 크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① **(등록해지)** '16년 중 주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계약해지는 6,853건, 신규등록은 7,359건으로 등록·해지가 매우 빈번*

* 빈번한 해지·신규등록으로 이중등록(대부업, 대부중개업 겸업), 차명등록 등 관리 곤란

- 불건전 영업(다단계, 홍보규정 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보다는, 대출모집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계약해지가 많은 상황

② **(내부통제)** 금융회사들은 분기별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모집 경로 파악, 불법광고·명칭 사용 점검 등 관리 필요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민원예방 등에 급급한 수준

③ **(규제현황)**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 규제*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행정지도) 적용)

* 보험설계사·카드모집인·투자권유대행인은 각 법률에 따라 등록, 의무 위반시 직접적인 행정제재 및 벌칙 대상이 됨

○ **(등록요건)** 의무교육(12시간) 이수, 1사전속 의무,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시 2년간 등록 금지

○ **(행위규제)** 사전고지(업무위탁 사실,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수취 불가, 직접 대출실행 결정 금지)의무, 과도한 권유 및 과대광고 금지 등*

* 과도한 경품제공, 고객DB 접근 및 신용정보조화, 고객정보 부정사용, 다단계 등

-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은 대출 후 즉시 파기 의무 (신용정보법 등)

○ **(금융회사 책임)** 대출모집인에 대한 교육·관리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과의 계약시,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수수료 감액/벌점 부과/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2 규제 강화 방안

< 기본 방향 >

- ①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회사 관리 책임을 강화
 - 대출모집인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감독 실시 및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의존도 축소 유도
- ②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
 -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강화 내용을 법제화하고, 금융당국의 시정조치·과징금 및 과태료부과·벌칙 등 제재 도입

(1)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개정 사항

① 대출모집인 등록요건 강화

- **(문제점)** 대출모집인으로서 필요한 준법의식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교육에 現 등록요건(12시간 교육이수)은 부족한 측면
- 한편, 소규모 대출모집법인은 모집인 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

○ **(개선)** 대출모집인 교육시간을 2배 확대*(12시간→24시간)하고, 평가시험 및 모집법인 인력·자본금 요건 등*(법 제정시까지의 권장사항으로 운영) 신설

* 법규 준수·금융사고 예방·신용관리의 중요성 등 소비자보호관련 교육 강화

** (예) 대출상당사 5명 이상, 자본금(또는 보증금예탁 등) 1억원 이상

② 대출모집법인 1사전속 의무 강화

- **(문제점)** 다른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다수의 대출모집법인을 동일인이 운영하면서 1사전속 규정을 우회하여 영업

* (예) A 캐피탈 수탁법인(甲)과 B 저축은행 수탁법인(乙)을 동일인이 운영하여, 대출상당사를 일괄 채용하고, 사실상 2개 금융회사 대출모집을 시행

○ **(개선)** 대출모집법인의 주주·경영진 등은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

③ 대출모집인 광고시 표시 방법 명확화

- **(문제점)** 대출모집인의 인터넷 광고·상품안내장 등에 위탁 금융회사명을 크게 표시하여, 금융회사로 오인할 우려
- **(개선)** 명함·상품안내장·인터넷 등 광고시, 대출모집인의 명칭을 금융회사 상호보다 크게 표시*하도록 광고규제를 보완

* (현행) 대출모집인 성명·상호 표시 의무

(개정) 대출모집인의 성명·상호가 금융회사 상호보다 크게 표시되도록 의무화

④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 금지

- **(문제점)** 대출상품 판매 경쟁 심화 및 모집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대출금 증액등을 제시하며 신규 고금리 대출을 권유*

* 대출금 증액을 희망하는 신용대출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발생

- **(개선)**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대출모집인 불건전영업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금융회사의 확인 의무를 부여

*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환대출은 금리부담을 낮추는 경우(고금리→저금리)만 허용

⑤ 대출모집수수료 공시·설명 의무화

- **(문제점)** 대출모집수수료로 인한 직·간접적 금리상승 요인 (신용대출 1~5%, 담보대출 0.2~2.4%)*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하기 곤란

*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에게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

- **(개선)** 소비자에게 대출모집인이 받는 모집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
 - 금융회사는 모집수수료율을 공개(홈페이지 등)하고, 대출모집인은 대출권유시 '모집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 향후, 대출모집인이 직접 금융소비자에게 모집수수료율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법 제정시 반영)

⑥ 금융회사의 대출모집과정 확인 의무화

- **(문제점)** 미등록모집인 등에 의한 대출모집, 대출모집인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금융회사의 확인 절차가 미비
- **(개선)**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대출모집인의 대출권유과정을 확인·점검*하여,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

* 대출모집인의 성명 및 소속, 모집경로, 고금리 대출 권유 여부 등 확인

⑦ 금융회사 계약서류 교부 의무화

- **(문제점)** 소비자가 모집인에게 받은 계약서류에 대출심사 후 계약조건(금리 등) 변경사항이 수정·반영되지 않아 불완전판매 우려*

* 일부 금융기관은 계약조건 변경에도 우선 녹취 후 계약서류를 재작성·교부 생략

- **(개선)**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리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최종 확정된 내용을 담은 대출계약서류 제공을 의무화

⑧ 대출모집인 이력 공개 확대

- **(문제점)** 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의 과거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규정 위반이력 등 파악이 곤란하여,

- 해당 대출모집인이 신뢰할만한 사람인지 알기 어렵고, 불완전 판매 및 개인정보유출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 **(개선)** '대출모집인 조회시스템'*에 대출모집인의 등록해지 사유 및 규정 위반 등 이력을 일정기간(예: 5년) 관리·공개

* (현행) 대출모집인의 '사진·성명·위탁금융회사·소속모집법인·등록일' 공개

(개선) '주요 이력'란을 신설, 등록해지사유 및 규정 위반 이력 등 공개

(2) 감독 강화 및 자율개선 유도

① 금융회사의 모범규준 준수 유도

-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운영실태에 관한 테마점검 등 금융당국의 집중 관리·감독* 실시
 - * 특이사항(불법수수료·개인정보 유출 등) 신고가 접수되거나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높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금년 중 점검 실시
- 금융회사 대출모집인 관리 실태를 '경영실태평가'(경영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반영하여 모범규준 준수를 유도

② 금융회사 자체 영업망 활용 등 자율개선 유도

- 은행 등 자체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유도
 - * 은행업권 대출모집인 수(명): ('13년) 4,826, ('14년) 3,942, ('15년) 3,905, ('16년) 3,678
- 대출모집인을 금융회사 내부로 흡수하거나 금융회사 자체 판매 채널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마련
 - * 은행업권 자율적으로 대출모집인 축소 계획을 금년 중 마련·발표 추진

③ 금융소비자 홍보 및 단속 강화

-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방문 및 인터넷·모바일뱅킹 활용등을 권장하고, 대출검색사이트* 및 불법금융신고센터** 홍보
 - * 서민금융길라잡이(www.hopenet.or.kr)의 '내게맞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www.koreaeasyloan.com), 여신협회 대출직거래장터(www.directloan.or.kr) 등
 - **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불법금융신고센터(www.fss.or.kr)를 통한, 개인정보유출·불법중개수수료 수취 등에 대한 신고제도 홍보 강화
- 대출모집인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 설정,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의 합동 단속 강화

(3) 법적근거 마련

- 現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등에 반영하여, 대출모집인 규제의 법적근거 마련
 - * 법률안 국회 기제출(5.23), 법률 통과('17년) 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18년) 제정 추진
- 특히,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수단 도입으로 규제의 실효성 확보
 - ① (특규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 등록을 법제화하고, 미등록자 및 미등록자에게 대리·중개한 자에게 벌칙* 부과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② (영업행위규제)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및 '대리·중개업자' 금지행위·고지의무 위반시 처벌 및 제재(3천만원~1억원이하 과태료,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 *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대출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광고규제
 - ③ (관리책임강화) 대출모집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①금융회사 손해배상책임, ②금융회사·모집법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 * (금융회사) 위탁 대출모집인의 영업행위규제 위반시 이익의 50% 이내 과징금, 제3자 위탁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모집법인) 소속상담사의 영업행위규제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회사 관리책임 강화, 대출모집인 의존도 축소 등 다각적인 방안의 시행을 통해,

- '과도한 대출을 권장'하는 영업 관행을 없애고, 준법·윤리의식을 충분히 갖춘 대출모집인만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금리부담 경감 및 금융거래 편의성 제공 등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출모집인만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업 환경 조성

Ⅲ.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규제 현황)** 대부광고에 대해 다양한 내용·형식상의 규제*가 운영 중이며, 특히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시간대 규제** 적용

* (내용) 이자율 등 제비용,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표기 등 (형식) 상호, 내용상 표기사항의 글자크기, 최소 노출 시간 등

**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휴일) 오전 7시~오후10시 (15.7월~)

- (법률 규제) 대부업 광고에 대해 광고표시, 시간대 규제 등을 도입하여 부당 대부광고 행위 등을 규제(대부업법 제9조)
 - (협회 자율심의) 대부광고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건별 규제 차원에서 대부업 협회의 사전 자율심의 제도 운영('12.4월~)
- **(문제점)** 대부광고에 노출되면서 고금리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어,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 관행 만연
- 다양한 내용·형식상 규제(및 시간대 규제)에도 불구하고, 방송 광고의 과도한 노출 및 내용의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 청소년 노출 최소화를 위한 시간대 규제의 경우, 청소년들의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규제 실효성이 낮아지는 상황

- ◆ 대부광고의 과도한 노출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다수의 법안이 국회(정무위)에 제출되어 있음

< 광고 규제 강도별 주요 의원입법안 현황 >

강도	규제 강화 → 전면 금지			
내용	·방학기간 평일을 휴일과 같이 규제 ·시간대 규제에 IPTV포함	·평일도 휴일과 같이 규제 ·광고총량제한	·방송광고 금지 ·IPTV광고 금지	·방송광고 금지 ·IPTV광고 금지 ·인터넷광고 금지
입안자	노웅래 의원안	정인화 의원안	제윤경 의원안	변재일 의원안

2 규제 강화 방안

< 기본 방향 >

- ◆ 소비자가 시청 여부를 선택하기 어렵고 영향이 광범위한 방송 광고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과도한 대부광고 노출 방지

- ① **(자율감축 행정지도)** '17년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토록 행정 지도('17.7월~)

- 금감원을 통해 자율 감축 이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 ② **(행정 규제)** 행정지도·광고심의권 등을 활용한 추가 조치 실시

* 금감원,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대부영업감독 방안에 포함하여 추진('17.10월)

- (내용 규제) ①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정보 표기, ②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 금지 등 추가 규제 도입

① 연체·채무불이행시 불이익(추심 등), 신용등급 하락가능성 등 명시

② 누구든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 등(누구나 300만원 등)

- (노출 제한) 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 검토

* (예시) ① 업체별 연간 송출횟수, 방송광고비 제한, ② 주요시간대(10시~11시) 집중적 광고 제한 및 연속광고 등 금지 등

- ③ **(법률 개정)** 국회 차원에서 추진중인 「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방안 강구

* 방송광고 및 IPTV 광고 금지(제윤경 의원안), 시간대규제(방학기간 및 IPTV 강화(노웅래 의원안), 광고총량 제한(정인화 의원안) 등

- 이 과정에서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의 필요성과 효과, 여타 금융권역과의 형평성 등 관련 쟁점을 면밀히 검토

IV. 추진 계획

1.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1)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개정 사항

① 등록요건 강화	교육시간 확대	모범규준 개정 (9월말)
② 1사전속 의무 강화	대출모집법인 경영진의 1사전속 의무	
③ 광고시 표시 명확화	자기 성명·상호 등을 크게 표시	
④ 대출갈아타기 권유 금지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권유 금지	
⑤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대출권유시 모집수수료 내용 설명	
⑥ 모집과정 확인 의무	금융회사의 대출모집과정 확인	
⑦ 계약서류 교부 의무	중요 계약조건이 기재된 계약서류 교부	
⑧ 이력공개 확대	대출모집인 위반이력 공개	

(2) 감독 강화 및 자율개선 유도

① 경영평가 및 감독강화	대출모집인 관리실태를 평가에 반영, 테마점검 등 집중 감독 실시	감독 강화 등 (17하반기 이후 계속)
② 자체영업망 활용 등 자율개선	은행 등 대출모집인 의존도 감소 유도 (은행권 자율개선 검토)	
③ 단속 및 홍보강화	불법·부당한 대출모집 관련 단속 및 홍보 강화(불법 금융신고센터 등)	

(3) 법적근거 마련

① 등록규제	미등록자 등 벌칙 부과	추진 중
② 영업행위 규제	금융상품판매 규제 및 모집질서 위반 (금지행위, 고지의무 등) 관련 처벌	
③ 관리책임 강화	금융회사 및 대출모집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과징금·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2.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① 자율감축 행정지도	'17년 상반기 대비 30% 자율감축	'17.7월~
② 행정규제	추가정보 표기 및 불건전 문구 금지,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상시화 등	'17.하반기
③ 법률개정	방송광고 금지, 시간대규제 강화 등	'17.하반기

참고1

대출모집인 제도의 문제점

◆ 대출모집인 관련 지속적인 제도보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및 금융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 우려 지속

① 대출상품의 판매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과잉대출을 유도하여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자부담 확대 우려

* (예) A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자영업자 김모씨는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금 증액이 가능하다며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권유받음

②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출모집인 수수료(신용대출(1~5%), 담보대출(0.2~2.4%))는 저축은행·캐피탈회사 등이 높은 대출금리를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16년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은 총 5천억원 이상(은행 1,636억원, 저축은행 2,328억원, 여전사 1,183억원)으로, 저신용층의 고금리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

③ 저신용자, 급전수요자 등을 대상으로한 허위·과장광고, 불법 수수료 징수*, 개인정보 유출**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 추가 대출이 어려운 다중채무자의 빚을 대신 상환하여 신용등급 상승 후, 은행 등에서 추가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수취

* 미등록 대출모집인(소위 "래퍼")이 다단계영업을 통해 고객 정보를 판매하거나, 다른 대출모집인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고객정보를 교환하여,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고, 대출상담 등 광고 전화로 고통받는 사례 발생

④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중개 위탁 제도를 활용해서, 대출 심사 등 대출계약 과정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도 나타남

* (예) 모집인이 모집한 대출건이 90일내 개인회생이 신청되는 경우, 모집 수수료의 상당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을 체결

참고2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기준」 주요 규제 내용

구분	주요 규제내용
등록요건	교육이수(12시간 이상)
금융회사 의무	<p>(계약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심사 등 본질적인 업무 및 사후관리 위탁 금지 1사전속 의무 <p>(관리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불완전판매 및 사고발생 방지 노력, 고객확인 대출모집인 의무위반시 불이익 부과 <p>(계약해지 및 손해배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모집인 의무위반, 사고·민원분쟁 발생시 계약해지 대출모집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소비자손해배상 책임
대출 모집인의 의무	<p>(의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 의무(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 고지의무(수수료 수취 금지, 직접 대출결정 금지 등)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과도한 대출 권유·유도 금지 분쟁 및 민원발생 최소화 <p>(금지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대광고(LTV, 대출금리 등) 금융회사, 정부·유관기관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상호 등 금지 금융회사 고객 DB접근 및 신용정보 조회 고객정보 외부유출 및 부정사용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요구·수수, 다단계모집 등 <p>(광고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 등 표기의무(등록번호 등 신원확인방법) 상품안내장 표기의무(대출관련 중요 사항) ※ 금융회사로부터 광고내용에 대한 사전동의 필요

참고3

대부업 광고 규제 현황

구분	규제내용	근거
법령상 광고 규제	<p>① 광고 필수 기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 광고시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 제비용,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 제재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법 제9조 ②③, 제12조, 제13조
	<p>② 광고문안 및 표기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광고 필수 기재사항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표기 * 상호('00대부)의 글자는 상표('러시앤캐시')의 글자보다 크게 표시, 이자율, 과도한 차입 경고 등은 상호와 같거나 크게 표기 등 ⇒ 제재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정지 	법 제9조 ④, 제12조, 제13조
	<p>③ 광고시간대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상 방송(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라디오방송 등)에 대해 대출광고 시간대 제한 *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휴일) 오전 7시~오후10시 ⇒ 제재 :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조 ⑤, 제12조
	<p>④ 허위, 과장광고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 과장·은폐·축소,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사용 등 ⇒ 제재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법 제9조의3 ①, 제12조, 제13조
	<p>⑤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 금지</p> ⇒ 제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조의2 ① ②, 제19조
협회 자율 심의	<p>□ 대부협회는 자체 「대부업광고심의규정」에 따라 모든 대부업자의 대부 영상광고를 사전 심의</p> ⇒ 제재 : ①5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 ② 허위·과장광고 등일 경우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	법 제18조의3 ① 시행령 제11조의2④